

제주지역의 4월혁명과 지역사회의 변화

박 찬 식*

요 약

제주 지역의 4월 혁명은 1947년 3·1 집회, 1948년 4·3 항쟁 당시 5·10 단독 선거 거부 이후 사라진 대중적 집회 및 시위의 부활이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던 제주지역의 시민들은 4월 혁명을 거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저항권을 인식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4월 혁명을 통해 최초로 거리로 진출해 대규모 시위를 전개한 것은 제주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정치사회적 영향을 미쳤고, 민주주의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였다.

제주지역의 4월 시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늦었던 이유는 지리적 격리, 정보의 부재라는 외적 변수 외에 4·3으로 인한 국가공권력에 대한 위축감, 반공 이데올로기, 레드콤플렉스 등 지역사회 내부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들 수 있다. 또한 제주지역 사회의 공동체성 때문에 보안 유지가 힘들고, 아는 사람들에 의해 회유를 받아서 봉기에 적극 나

* 제주대학교 사학과 강사

서지 못하는 점도 지적된다.

제주 지역의 4월 혁명은 학생운동으로 시작하여 시민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지역사회를 변혁시켜 놓았다. 제주대학 학생들이 주도하고,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시민계층으로 확산되었다. 이들 혁명의 주체세력은 봉기 및 시위에 그치지 않고 '4월 혁명 완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역 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을 변화시켰고, 전국적인 통일운동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학원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과거 역사 해결운동으로서 4·3사건 진상 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4·3사건으로 인한 레드콤플렉스를 뚫고 7·29 총선거에서 혁신운동 계열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도 하였다.

주요 색인어: 4월혁명, 4월시위, 4·3항쟁, 제주지역 시민계층,
제주대학생, 4월혁명 완수사업, 학원민주화운동,
통일운동, 4·3진상규명운동

I. 머리말

1960년 4월혁명(4·19혁명)은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여러 사회 변동의 요소들을 내포한 가운데 발발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시민참여 변혁운동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권 유지를 위해 폭압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부정부패를 만연시켰으며 민중들의 불만은 팽배해갔다. 이런 와중에 치러진 1960년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독재체제에 대한 불만을 전면적으로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시내의 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시위는 3월 15일 마산 봉기를 거쳐 4월 전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4월 19일을 정점으로 하여 대학생들과 교수, 시민들이 참여한 대대적인 군중시위로 발전하였다. 결국 이승만 정권은 4월 26일 마침내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한국현대사의 변혁 과정에서 4월혁명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첫째, 4월혁명은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보편 원리와 기본 절차를 무시한 독재정권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과 민주주의 보편성을 인식한 신세대 학생과 시민층이 봉기의 주체로 나선 변혁운동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4월혁명은 대구·마산 등 지방으로부터 시작되어 심장부 수도를 타격한 밑으로부터의 운동이며, 국내 모든 지역이 항거에 참여한 전국적 수준의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본고의 대상인 제주지역을 뺀다면 위 두 가지 의미는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남단, 육지와 격리된 섬인 제주지역의 운동이 포함되면 4월혁명의 전국화는 완결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4월혁명 당시 제주

지역민은 10년 전 4·3을 통해서 국가공권력이 행한 폭력의 상흔을 내재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포섭되지 못한 사회심리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곧 제주지역의 4월혁명에 대한 고찰 작업은 지리적이 아닌 심리적인 전국화로서, 4월혁명을 진정한 전국적 민주주의 변혁운동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4월혁명에 대해서는 개설적인 서술조차 거의 시도된 바 없었다. 4·3연구자들 사이에서 4월혁명 이후 전개된 4·3진상규명운동에 주목한 글이 나왔을 정도이다. 이영권 씨의 1950년대 제주도 유력자 집단의 변천과 성격을 검토한 글이 있는데,¹⁾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지역신문인 『제주신보』²⁾ 등 신문기사와 당시 체험자의 구술자료³⁾를 중심으로 우선 제주지역 4월시위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기본 열개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다. 원래 4월시위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했지만 현재로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인 듯싶다. 초보적인 글이라도 일단 구성해서 발표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사료를 되짚고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1) 이영권, 2002, 「제주도 유력자 집단의 변천과 성격」, 『4·3과 역사』 2, 제주4·3연구소.

2) 『제주신보』는 1945년 해방 직후 창간된 『제주민보』를 계승하여 1946년 6월에 발행되었다. 1947년 1월 계속되는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회사를 주식회사로 개편하였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5월 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제주 지역민들로부터 양민학살 진상규명신고서 1,259건을 접수하여 국회 4·3사건진상조사단에 전달하였다. 1962년 군사정부의 언론 정책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 발행되던 『제주신보』와 『제민일보』는 『제주신문』으로 통합되었다. 『제주신보』는 4월혁명 당시 시위 상황을 보도한 제주지역의 유일한 신문이었다.

3) 제주지역의 4월혁명의 주역인 이문교 선생(1938년생, 제주시 연동)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제주시 연동 자택, 2002. 5. 16 채록;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 2010. 6. 19 채록). 본고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제주지역 4월혁명의 주역이신 이문교 선생께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II. 4월 시위의 전개과정

1. 제주지역에서의 3·15 부정선거

1960년 3·15 부정선거는 전국적으로 4월혁명을 촉발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제주지역에서도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의 행태가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었다.

관권 부정선거는 1959년 10월부터 사전 준비되고 있었다. 4·19 직후 구속된 전인홍 제주도지사의 공소장을 보면, 1959년 10월 하순에 도지사실에서 국·과장,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교육감 연석회의를 열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공무원친목회를 제주도에도 조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내 각 공무원들에 대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의논했다는 것이다. 관권 선거운동의 조직 및 운영은 고정협 제주시장에게 전임시켰고, 제주도내 읍·면 단위로 공무원친목회를 결성케 하여 선거 조직으로 활용케 하였다. 또한 친목회 소속 공무원들이 일반 유권자 25명씩 각각 포섭하여 자유당 입후보자를 반드시 당선시키도록 했다는 것이다.⁴⁾

제주지역에서의 관권 동원 선거는 다른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된 비밀지령에 따른 것이었다. 4·19를 거친 뒤 부정선거 수사에 착수한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 전 북제주군 교육감 김시형으로부터 3월 3일자 내무부 지방국장 최병환이 보낸 비밀지령서를 입수했다. “득견(得見) 즉시 소각하라”는 단서가 쓰인 지령서에는 30만원을 총무국장에게 보내니 받으라고 하고, “전 공무원은 단결하여 자유당의 이승만·이기봉 양인을 기필코 당선시키라”고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청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국·과장, 시장, 군수, 교육

4) 『제주신보』, 1960. 6. 12.

감 등을 모아놓고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앞장서도록 강요한 사실을 증언했다.⁵⁾

중앙으로부터 선거자금이 유입되어 기관장급에게 전달되었으며, 경찰기관 등에서는 일반 지역민들로부터 자금을 거두어들이기도 하였다. 제주도 총무국장 100만원, 경찰국장 100만원, 제주·서귀경찰서장에 250만원, 지서 주임 80만원, 경찰단위조장 60만원, 자유당의 도당과 시당, 시장·군수 등에게는 70만원 등의 내역으로 자금을 뿌린 사실이 관련자 증언과 방증을 통해 드러났다고 하였다.⁶⁾

투표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행해진 부정투표 방식이 제주지역에도 실시되었다. 선거인명부에 유명인물을 기재하거나 번호표를 일체 교부하지 않고 사전 4할 투표를 하였고, 비밀경찰의 지휘 아래 3인조 공개 투표 등을 했으며, 환표(換票)나 환함(換函) 등이 행해졌다.⁷⁾

2. 시위 준비와 좌절 - 제주대 학생그룹의 시도

4월혁명은 제4대 대통령선거일인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일어난 두 차례 시위가 기폭제 역할을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월 19일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는 전국적으로 불길처럼 번져갔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전국적인 4·19 시위에 아랑곳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제주도 행정당국에서는 4월 15일자로 3·15선거 후의 민심수습책을 각 시·군에 시달하였다.⁸⁾ 4월 20일 문교부의 지시에 의해 국민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임시

5) 『제주신보』, 1960. 5. 29.

6) 『제주신보』, 1960. 5. 14 ; 5. 29.

7) 『제주신보』, 1960. 5. 18.

8) 『제주신보』, 1960. 4. 20.

휴교에 들어갔다.⁹⁾

4월 21일 제주경찰서에 제주시내 각급 학교 대표와 도 장학진, 정당·사회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모여서 데모 방지에 대한 사전 무마책을 논의하였다. 이 대책회의에서 조 경찰서장은 학생들이 데모를 감행할 시에는 최후 수단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경찰방침을 천명함으로써 발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특히 학교 대표들은 교사, 학부형, 사친회, 동창회 등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휴교령에 따라 지방학생들은 귀향시키고 교사들이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¹⁰⁾

4·19를 지나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때까지도 제주지역 사회는 숨죽인 듯이 고요한 상황이었다. 오히려 경찰이 시민을 억압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중앙 언론의 가십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즉 4월 26일 사찰 형사가 “데모 사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 당원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¹¹⁾

그러나 위와 같은 표면 상황과는 달리 일부 제주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면에서 끊임없는 시위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었다. 제주지역에서의 봉기는 3·15 부정선거 직전인 3월 초부터 이문교·고시홍·박경구를 비롯한 제주대학 법과 2학년생을 중심으로 용담캠퍼스와 북신로 이문교의 자취방을 오가며 사전 계획되고 있었다.¹²⁾ 이들은 제주시내 6개 고등학교(농고, 오고, 일고, 상고, 신고, 여고) 학생회장과 연락을 취하여 3월 7~8일을 기해 대대적인 집회 및 시위

9) 『제주신보』, 1960. 4. 21.

10) 『제주신보』, 1960. 4. 22.

11) 『동아일보』, 1960. 4. 28.

12) 이문교 선생의 증언(제주시 연동 자택, 2002. 5. 16 채록 ;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 2010. 6. 19 채록).

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를 사전 탐지한 경찰당국은 교수·교사 및 친인척 등을 총동원하여 와해 공작을 벌여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제주신보』 사설에도 “4·19사태에 곧이어 도내의 대학생 12명이 주동되어 재빨리 데모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전 탐지한 경찰의 혹독한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³⁾ 결국 전국적인 4·19봉기에도 제주지역은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다. 4월 20일 휴교령이 내려지자 지방학생들은 귀향해 버리고 조직은 더욱 약화되어 버렸다.



제주지역 4월혁명의 주역인 '4·3진상규명동지회'가 당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문교 선생 소장)

3. 4·27시위 - 제주시내 학생이 주도한 첫 봉기

4·19봉기에 실패한 제주대학생들은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

13) 『제주신보』, 1960. 5. 1.

야 소식을 듣고 재결집하였다.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시위 대열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갖고 있던 학생들은 늦게나마 전격적인 조직화에 나섰다. 4월 26일 저녁에 관덕정 앞에 일군의 학생들이 모였으나 일정한 계획이 없는 비조직적인 모임이었다. 관덕정에 모인 이들은 경찰의 무대응을 확인하고 곧바로 밤새도록 작업하여 다음 날 대대적인 시위를 위한 조직 동원에 나서게 되었다. 각 학교별로 연락을 받은 학생들은 4월 27일 밤 9시 반을 기하여 기습적인 첫 시가지 시위를 전개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 4·27시위 상황을 살펴보자.¹⁴⁾

4월 27일 밤 9시 30분 제주시내 2개 극장이 끝나는 시간을 계기로 시내 각 중고등학교 학생 1백여 명은 오현중고교 앞을 행진하면서 전우가와 구호를 외치며 데모를 전개하였다. 골목골목마다 대기해 있던 남녀 중고교생들의 가세로 한 시간 후에는 1천5백 명 이상으로 수가 늘어났다. 이들 시위대는 시내 5개 동(일도·이도·삼도·건입·용담동) 중심가를 시위한 다음 급보에 놀라 가족과 같이 피신해 버린 김용학(金龍學) 경찰국장 관사에 난입하였다. 시위대는 “국장은 나와서 불법선거를 사과하라”, “학원의 자유를 달라”고 외쳤는데, 그 중 흥분의 극에 달한 일부 학생의 투석으로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었다. 데모대는 경찰국장이 이미 피신 중임을 알고 도지사 관사 앞으로 옮겼다. 이들은 “도지사는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외쳤으나 전인홍(全仁洪) 지사 역시 부재중이어서 관덕정 광장에 자리 잡은 제주경찰서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도지사·경찰국장과 대면을 요구했다.

이때 데모대에서 잠시 이탈했던 20여 명의 학생들은 지난 4월 21일 제주경찰서가 주최한 도내 각 기관장 회의 때 만일 본도에서 데모가 일어나면 총으로 쏘아 죽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영주시보

14) 『조선일보』, 1960. 4. 30.

사 사장 강필생(姜必生, 56)씨를 데모 학도들 앞으로 끌고나왔다. 흥분한 일부 학도는 강씨에게 폭행을 가했으나 즉시 주위의 데모대에 의하여 만류되었다.

결국 하오 11시 20분 전인홍 지사가 시위대 앞에 나타나 자유당의 불법선거를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지사직을 물러날 각오가 이미 굳어진 것을 피력하고 학도들의 평화적 시위를 찬양하기에 이르러 사태는 일단 수습되어 12시 15분경 완전 해산하였다.



4월 27일 시위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1960. 4. 30)

4. 4·28시위 - 1만 명 군중 시위, 제주도내 각 지역으로 확산

4월 28일 오전 전인홍 제주도지사는 자신과 김용학 경찰국장, 조 경찰서장, 고정협 제주시장, 좌문규 제주도 총무국장 등이 사표를 제출

했음을 담화문을 통해 발표했다. 결국 전날 밤 3·15 부정선거에 대한 지역 공직 책임자들의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제주시내 학생·시민들의 대대적인 시위와 강력한 촉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전날 해방감과 자신감을 획득한 학생·시민들은 4월 28일 오후 시가지로 쏟아져 나왔다. 오후 5시 30분경 또다시 시위를 전개한 군중의 수는 1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시위대는 오전에 담화를 통해 사퇴를 표명한 공직자들이 직접 나와서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용학 경찰국장, 고정협 제주시장 등이 군중 앞에 나와서 직접 공개 사과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4월 28일 시위는 해산하게 되었다. 이때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물론 무장한 군인들도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시가지에서 철수했다. 시위 군중들은 자유당·경찰서 등 간판을 파괴하며 시가지를 마음껏 행진하였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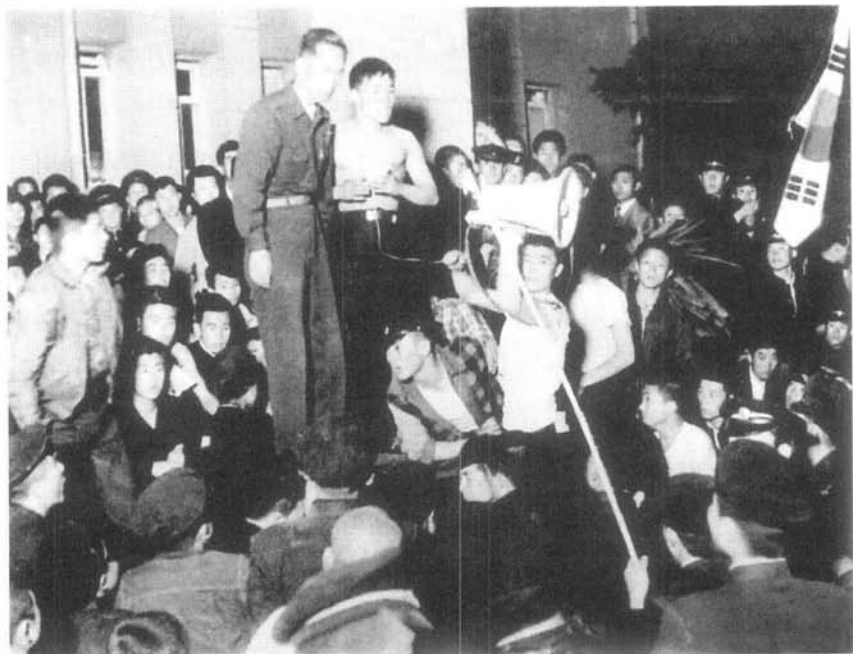
제주시에서 비롯된 시위는 4월 28일부터 각 읍·면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조천면 함덕리에서는 4월 28~29일에 걸쳐 2백여 명의 함덕중고교 학생과 수많은 일반 주민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를 전개했다. 4월 28일 밤 9시 반부터 약 70여 명의 함덕중고교 학생들이 데모에 돌입하자 백여 명의 일반 면민들도 학생데모 대열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학원의 자유를 달라”, “자유당 정부는 물러가라”, “도의원·면의원은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마을 골목길을 행진하였다.¹⁶⁾

또한 조천면 조천리에서는 데모대가 조천면장 집 앞에 연좌하여 면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였다. 김 면장은 데모대 앞에서 면장직을 물러날 것을 약속하였고, 자유당 조천면당위원장 이은행 씨는 3·15 부정선거에 책임을 느껴 자유당을 탈당함은 물론 신문지상을 통하여 면

15) 『경향신문』, 1960. 4. 29.

16) 『제주신보』, 1960. 5. 1.

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하였다.¹⁷⁾



4·28시위 때 제주경찰국 앞에 모인 시위대가 경찰국장에게 항의하는 광경.
경찰관 정복을 입은 사람이 김용학 경찰국장이다.
그 옆에 상반신을 벗은 학생은 제주대학생 고공영(상과)이며, 스피커를 잡고
있는 사람은 제주대학생 이문교(법과)이다.
(이문교 선생 소장)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위와는 별개로 4·19 희생자들에 대한
성금을 모금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는데, 각 지역의 학생들도 이
에 호응하였다. 중문의 청년·학생이 주도하여 4월 28일부터 모금하
였고, 조천에서는 4월 28일 하루에 모금이 이루어졌다. 한림에서는 한

17) 『제주신보』, 1960. 5. 1.

림중고교 학생들이 주도하여 4월 29일 하루에 7만5천여 환이 모금되었다.¹⁸⁾

5. 4·29시위 - 3천명 집회, 시가행진

4월 29일 사흘째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이날은 저녁 또는 밤에 시작된 4·27, 4·28시위와는 달리 오후 3시부터 관덕정 집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관덕정 앞 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민주학원에 자유를 달라”, “참다운 민주국가를 건설하자”, “학도는 사태수습에 선봉이 되자”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경찰은 중립을 지켜라”, “권력으로 모인 돈 국민에게 돌려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시작하였다. 오후 4시가 넘자 각급 학교 학생 1천여 명이 모였고, 주위에는 2천여 명의 일반 대중이 운집하여 관덕정 앞 광장은 3천여 명의 인파로 뒤덮였다.

관덕정 앞 광장에 모인 시위대 데모에 들어가기 앞서 오후 4시 15분 문종채(제주대 법학과 3년)의 사회로 애국학생결기대회를 열고 4·19희생학도에게 1분 간의 묵념을 올린 후 선언문 낭독(제주대 상과 2년 고공영), 결의문 낭독(제주대 법과 2년 이문교), 호소문 낭독(제주대 법과 3년 고순화) 등을 통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였다. 기성세력을 불신하는 여덟 가지 구호를 강종홍(제주대 국문과 1년)의 선창으로 소리높이 제창하였으며, 대회장 고익조(제주대 수의과 4년)는 개회사를 통해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는 데 만시지감이 있으나 우리 학도는 한결같이 단결하여 앞으로 학도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일체의 난동은 절대 삼가라”고 강조하면서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데모를 하여 지금부터는 사태 수습 방향으로 나가자고 촉구하였다.

18) 『제주신보』, 1960. 5. 1.

4시 50분 대한민국 만세삼창으로 공식적인 집회가 끝나자 학생시위대는 동서로 나뉘서 관덕정 앞을 출발하여 동문로터리, 서문통 일대, 산지 일대 등을 힘차게 행진하였다. 시가행진 과정에서 일부 학생시위대 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세리를 규탄하자는 기세를 올려 세관과 세무서 세관장 집에 투석하여 유리창이 파괴되기도 하였다. 이날 무장한 육군 군인은 경찰청사 앞과 검찰청 주변을 경비하였다.

한편 제주대학생 30여 명은 쫓겨대회가 끝나자 즉시 검찰청으로 향하여 연좌하여 3·15선거를 규탄하는 구호와 부정선거 하수인, 부정세리, 부정공무원을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친 후 원 검사장(元澤淵)을 대면하였다. 학생들은 검사장에게 △부정선거 하수인 처벌 △부정재물 취득자 처벌 △부정공무원 처벌 △협박사건 진상규명 △고발고소 등 5개 조항의 요구 사항을 내걸어 강력한 처리 방침을 촉구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검사장과 시위대 사이에 한 시간 가까이 토론이 벌어졌다. 이때 검찰청 주위에는 2천여 명의 군중이 이 광경을 구경하였다. 원 검사장은 “이번 학도들의 영웅적인 의거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정권이 물러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참다운 민주주의가 온 것이니, 여러분은 학원으로 돌아가 학업에 충실하기 바라며 건설적인 일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어서 시위대의 요구사항 중 부정선거 하수인 문제 외의 것은 확증만 있으면 검사장이 의법조처 할 수 있으나 부정선거 하수인 처벌 문제는 이제 내각이 조직되고 국가방침만 세워져 대검찰청장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이에 따라 행동을 할 것이니 지방검찰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계를 명백히 하였다.



4월 29일 시위 학생들에게 해명하고 있는 원택연 검사장과 운집한 시위대의 모습(이문교 선생 소장)

이날 시위대는 산발적인 시가행진과 데모를 전개하였으며, 시가행진에 돌입한 지 한 시간이 지나자 각 학교별로 해산하기 시작하여 오후 7시가 지날 무렵 거의 해산하였다.¹⁹⁾ 이로써 3일 간에 걸친 제주시 중심의 4월 시위는 마무리되어 갔다.

그러나 읍·면 지역의 주요 마을에서는 4월 29일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하였다. 조천리에서는 전날에 이어 4월 29일 약 3백명의 학생·청년이 섞여서 시위를 전개하여 “애국학도 홀린 피로 이 나라 건설하자”, “독재정치 물러났다” 등 구호를 외치면서 조천면장과 자유당 면당위원장 이은행 씨에게 직접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시위

19) 『제주신보』, 1960. 5. 1.

대는 첫째 3·15 선거 시 투표함을 개봉하고 야당 표 3백여 매를 바꿔친 자들의 명단을 밝히라, 공직에서 물러가라 등 10개 조목을 내걸었다. 시위대 앞에서 김 면장과 이 위원장은 3·15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약속했으며 과오를 사과하였다.

같은 날 조천면 신촌리에서도 중고교생과 일반민 약 백 명이 데모에 참가하여 신촌리사무소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신촌리 출신 부면장과 리장, 신촌수리조합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쳤다. 또한 함덕리에서도 28일 시위에 이어 29일 시위에서 2백여 명의 시위대는 부인회 회장 집 앞에서 부인회 간부들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일부 반공청년단 간부에게도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외쳤다. 이날 데모는 저녁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전날과 같이 구호를 외치며 쫓기하다가 해산하였다.

또한 표선면에서는 표선중고교 학생 약 4백 명이 4월 30일 12시부터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행하고 오후 2시 반 해산하였다. “자유당 앞잡이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가를 행진한 뒤 해산하였다.²⁰⁾ 애월면 하귀리에서는 5월 1일 저녁부터 시위가 벌어져 경찰지서 주임과 국민학교 교장에게 물러가라고 외쳤으며, 우도리에서도 4월 29일 시위가 전개되었다.²¹⁾

6. 5·1위령제의 거행 - 사태 수습, 선무대 출범

사흘 동안 대대적인 시위를 마무리한 제주대학을 포함한 제주시내 남녀 각 고등학교 학생 대표는 4월 30일 오후 제주신보사 중역실에서 회합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생 대표들은 우선 4

20) 『제주신보』, 1960. 5. 1.

21) 『제주신보』, 1960. 5. 3.

월 29일 밤으로 데모는 일단락 지을 것으로 합의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학생연합선무대'를 구성하여 하루 빨리 질서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합의하였다. 이들은 제주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모와 파괴 행동을 진압하는 데 힘쓰기로 하여 제주도 동서 양쪽으로 수습을 위한 '계몽선무반'을 급히 파견하기로 하였다. 또한 5월 1일 오전 10시에 제주시내 관덕정 광장에서 '4·19학생학생합동위령제'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이 위령제에는 제주시내 학생 시민은 물론 지방 학생들의 많은 참가를 요망하였다.²²⁾

5월 1일 치러진 4·19학생학도합동위령제에는 제주대학 및 제주시내 각 고등학교 학생 공동주최로 관덕정 광장에서 1천5백여 명의 남녀 중·고·대학생과 40여 명의 각 기관 대표, 중·고 교장, 유지, 그리고 수백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²³⁾ 위령제는 오전 11시 30분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4·19학생학도에게 1분 간의 묵념, 청혼과 독경(조계종회)을 끝마친 후 영전경례와 분향(제주대학생 대표)을 하였다. 이어서 경과보고와 조문 낭독, 조사를 행한 후 회향과 염불, 내빈과 학도 대표들의 소향이 행해졌다. 3발의 조포가 발사된 뒤 참석자들은 학도호국단의 노래를 제창하여 12시 30분에 행사는 끝났다.

이날 위령제에 참석한 학생들은 젊은 피를 흘려 민권을 되찾은 영혼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었으며, 각 학교 대표와 재경학우회, 중앙대학 학우회 대표들은 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던 참다운 민주주의가 4·19혁명에 쓰러진 젊은 애국 학도들의 의거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민주주의 새 싹이 트고 민주주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축원하면서 남아있는 학생들은 이 가룩한 유지를 받들어 이 땅에

22) 『제주신보』, 1960. 5. 1.

23) 『제주신보』, 1960. 5. 2.

불의와 불법이 없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맹서하고 영령의 명복을 빌었다.

위령제를 거행한 이후 학생들은 4·19희생자 조위금 모금운동과 더불어 사태 수습을 위한 선무대 활동에 나섰다. 우선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위 전개 이후 학생들은 4·19 희생학도에게 보내는 조위금 각출운동을 전개하였다. '4·19희생학도합동위령제준비위원회'는 합동 위령제를 마친 뒤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모금된 조위금 가운데 3만원을 4·19시위로 서울에서 희생된 삼양동 출신 안창원의 유가족에게 5월 3일 전달했다.²⁴⁾ 제주대학생들도 '제주대학 애국상해 학생 구호모금운동반'을 조직하여 모금운동에 적극 나섰다.²⁵⁾

사태 수습을 위한 학생선무대는 제주대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4월 30일 인원을 제주도 동서지역으로 나눠서 4일 간에 걸쳐서 순회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데모의 사전 방지와 수습, 경찰과 행정의 기능 회복, 민원 파악에 주력하면서 치안 유지에 성과를 거두었다. 선무대의 활동을 종합한 결과, 사적 보복 행위, 관에 대한 불평, 기관장의 사퇴 요구, 기성세력에 대한 불신 등이 주로 시위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선무대는 일주도로 주변의 마을과 읍면 소재지의 동태를 살피고 여론을 수집하면서 행동하는 한편 계몽도 병행하였다.²⁶⁾ 또한 각 학교 학생들은 4월 30일부터 임시로 치안대를 편성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선무공작에 나서기도 하였다.

선무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에서는 끊임없이 학생 데모가 일어났다. 모슬포에서는 5월 4일 오전 9시부터 대정중고교 학생 6백여 명이 대정면사무소, 경찰지서, 우체국, 대한부인회 사무실과 학

24) 『제주신보』, 1960. 5. 5.

25) 이문교 선생 소장 '모금 호소문' 전단(1960. 5. 26).

26) 『제주신보』, 1960. 5. 5.

교 등 각 관공서를 포위하여 책임자로부터 말단직원에게 이르기까지 개별적으로 부정선거 책임을 물어 사과를 받고 즉각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하였다.²⁷⁾ 한림중고교 학생들은 5월 4일 학교 교정에서 8백여 명이 모여서 합동위령제를 열고 평화적인 데모를 전개하였다. 이 시위에서 학생들은 자유당 당직자는 물러나라고 외쳤다.²⁸⁾ 서귀농업고교 학생들은 5월 4일 학생회의를 열고 이기휴 교장에 대한 사표를 건의하였다. 5월 5일 이 교장은 학생 대표들이 입회한 가운데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²⁹⁾

당시 제주도 읍·면지역 시위는 다른 곳과는 달리 관공서와 국민학교는 물론 교직자들까지 한 사람 빠짐없이 부정선거 연루사실에 대해서 추궁하고, 마을 단위의 부정선거 협조자 또는 자유당 관련자들을 심판하였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을 단위 조사·연구를 통해서 미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4월시위를 전후한 지역사회의 변화

1. 4월시위 이전 지역사회의 동향

1945년 해방 직후 제주지역 사회에서는 일제 식민지 권력을 대체할 신진 세력으로 급속히 대체되었다. 이들은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중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새로운 정치사회질서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인민위원회 중심의 자치운동 움직임은 미군정의 통치와 맞물려 친미 정치인의 등장과 친일 행정관료·경찰간부의 재등장을 불러왔다. 1947

27) 『제주신보』, 1960. 5. 6.

28) 『제주신보』, 1960. 5. 6.

29) 『제주신보』, 1960. 5. 7.

년 3·1사건은 '민족 대 반민족'의 구도 속에서 민족·민중적인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세력이 공권력에 의해 일선에서 후퇴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⁰⁾

4·3을 거치면서 제주의 민족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청년급진세력이 무장봉기를 일으켰지만, 오히려 강력한 탄압에 부딪혀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되는 참화를 겪었다. 4·3 이후 극우반공체제의 권력구조가 급속히 자리 잡으면서 제주도민들은 군·경 중심의 극우세력에 대한 공포심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4·3을 거치면서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인사들은 제거되었고, 제주지역을 대부분 떠났다. 제주에 남아있는 인사들은 철저히 반공국가 체제에 순응하여갔다. 제주의 권력구조는 외래 군·경 출신들이 완전히 장악하였고, 제주지역의 토착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되었다.³¹⁾ 4·3의 과정에서 남로당 또는 무장대에 가담하지 않았으면서도 행정·교육·법조·언론계 유력 인사들이 즉결 처분되었다.

1950년 6·25 한국전쟁은 제주지역의 권력구조를 더욱 우익·외래 세력 위주로 굳어지게 만들었다. 전쟁의 와중에 27,000명의 보도연맹원들을 별도로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1천여 명을 예비검속시켜 총살하였다. 1950년 8월에 있었던 '제주도 유지사건'은 외래 군부세력이 토착세력을 억압한 대표적 사례로서, 법원장·검사장·제주읍장 등이 계엄군 정보과장(대위)에 의해 사형 직전까지 몰렸다.³²⁾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이 반공국가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4·3으로 인한 억압적 분위기가 다소 완화되어갔다. 적성지대로 여기던 중산간 마을로 주민복귀사업이 추진되었고, 전쟁 과정에 설치된 모

30) 박찬식, 2006,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집회와 총파업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2.

31) 이영권, 앞의 논문.

3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슬포 육군 제1훈련소가 해체되었다. 또한 군·경 당국에 의해 봉쇄되었던 모슬포 예비검속 학살자 유골이 1956년 수습되어 '백조일손지묘'가 조성되었다. 외지 출신자로 임명되던 제주도지사와 제주지방법원장에 제주 출신이 임명되었다. 물론 경찰 수뇌부는 계속 외지인이 장악하였다.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후보 고담룡이 당선된 것은 우익권력구조 하에서 빚어진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 4월시위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

4월혁명은 제주지역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적인 4·19시위의 전개와 4·26 정권붕괴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의 기조가 무너지자, 지역사회를 지탱하던 공권력 체계도 함께 크게 동요하였다. 제주지역 학생들은 4월 27~29일 시위를 통해 3·15 부정선거를 행정, 경찰, 관변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지목하고 이들 공조직의 대표자를 시위대 앞에 소환하여 공격하는 수순을 밟았다. 즉, 시위 과정에서 전인홍 제주도지사를 비롯하여 제주도청 좌문규 총무국장, 김용학 경찰국장과 고정협 제주시장, 김○○ 제주도반공청년단장 등에게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죄하였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약속 받았다. 중앙의 정세에 비교적 둔감하였던 자유당계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5월 초 도의회 의장 김도준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자 5월 3일 후임으로 강영술을 선임하였다.³³⁾

4·19 한 달 후인 5월 19일자 『제주신보』 기사에는 제주지역 정치

33) 『제주신보』, 1960. 5. 4.

사회 권력의 변화상이 아래와 같이 잘 묘사되어 있다.

“고귀한 피의 대가로 제2공화국이 이루어진 오늘 이 섬에서는 어떠한 변혁을 가져왔던가! 지난 4월 27일을 기하여 본도에도 학생봉기가 시작되어 며칠 동안을 두고 파상적으로 지방으로 파급되었다. 3·15 부정선거에 관여한 각급 공무원직장의 책임자들은 물러서라고 외쳤으며 각급 남녀중고교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목숨을 나라에 바친 영령의 명복을 빌었으며 각계에서의 정성어린 조위금은 490여만 환이나 모여지고 있다.

중앙에는 과도정부가 3·15 부정선거의 원흉들을 처단하는 한편 모든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으며 본도에서도 도백을 위시한 경찰 수뇌, 시장 등이 자리를 물러섰다. 국회는 소수의 민주당이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다수의 자유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 내각책임제 개헌을 서두르는 일방 민권을 박탈하는 독재의 이기로 쓰여 오던 헌법을 뜯어고치기 시작하였다.

본도에서도 자유당 도당부는 해체나 다름없이 와해 상태가 되고 말았으며 민주당 도당부는 당세 확장 등 힘찬 전진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도의회는 갈팡질팡하다가 의장만을 개선하고 부의장만은 공석이 되고 있다. 이리하여 민주 의욕에 부풀어 오르면서도 멀리 떨어진 섬이란 위치적 조건과 다년 간 관권에 짓밟힌 압제로부터 호흡이 막힌 채 살아오던 도민에게도 민권을 다시 찾고 새 생활을 설계해 보려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즉, 제주지역 사회의 변화상을 크게는 부정선거에 앞장선 기존 공직자 배척과 청산, 지역 정치권력의 변화로 거론하였다. 이외에도 학원 민주화의 바람, 통일운동의 전개, 4·3진상규명의 움직임, 교원노조

설립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1) 기존 공직자의 배척 운동

전인홍 제주도지사와 김용학 경찰국장은 시위 과정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 중앙의 명령에 의해 4월 30일자로 지사직과 국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제주도의회 김도준 의장이 사임했으며, 고정협 제주시장도 5월 16일 사임하였다. 원택연 검사장도 5월 26일 사임하였다. 5월 25일에는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중앙의 지시에 의해 1차로 부정선거 관련자 전 지사 전인홍, 전 총무국장 좌문규, 전 경찰국장 이창훈, 전 경찰국 제2과장 현채성 등이 입건되었다.³⁴⁾ 이외에도 각 읍·면장, 제주도농사원장, 일부 학교장 등이 사퇴하였다.

제주도의회 또한 김도준 의장이 사임하고 강영술 의장이 새로 선임됐지만, 제주대학생들은 근본적으로 도의회의 해산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³⁵⁾

2) 학원민주화 운동

5월 6일 제주대학에서는 8백여 학도 일동의 명의로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³⁶⁾

1. 우리는 어용기관인 학도호국단을 해체함과 동시에 학생자치기구를 조직하여 학원의 자유를 사수한다.

1. 우리는 도내의 최고의결기구인 도의회의 즉각 해산을 요구한다.

1. 우리는 현금 정치적 전환기를 이용하여 무절조하게 어부지리를 득하려는 정상배를 경계한다.

34) 『제주신보』, 1960. 5. 27.

35) 『제주신보』, 1960. 5. 5.

36) 『제주신보』, 1960. 5. 7. ; 이문교 선생 소장 문서.

1. 우리는 4·19의 의거정신을 전승하고 차후 민주주의 발전에 암이 되는 사실이 있을 때는 붉은 피를 뿌려 이를 배격하고 순국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생들은 우선 학장 및 어용교수를 배척하는 데 나섰다. 제주대학 조현하(趙曉夏) 학장은 5월 6일 4백 명이 참석한 임시 긴급학생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사표를 제출하였다.³⁷⁾ 나아가 학원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나섰다. 학도호국단을 자치학생회로 개편하였으며, 학원의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을 청산하였다. 이러한 학원민주화운동은 공개조직인 '제주대학학생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자치위원회는 5월 9일 '제주대학 4·19이후 사태수습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학원 정상화, 도의회 해산 요구 등 대내외적인 후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공개적인 자치위원회와는 별도로 1961년 3월 18일 '4월혁명과업완수 제주대학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혁명정신을 모독하는 특징인 및 기관을 규탄하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³⁸⁾ '투쟁위원회'는 특히 중앙에서 조직한 특검 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0년 12월 23일 혁명과업을 처리·완수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검찰부가 구성되었는데, 특검부는 30명의 검찰관과 각 도마다 15명의 조사위원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특검의 활동은 공소시효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투쟁위원회'는 새로이 민선 도지사에게 당선된 강성익의 자유당 정치자금 제공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미진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³⁹⁾ 4월혁명을 주도

37) 『제주신보』, 1960. 5. 7.

38) 『제주신보』, 1961. 3. 21.

한 제주대학생들은 이렇듯이 끊임없이 학원과 지역사회를 향한 대내외적인 정치사회적 발언 공간을 확보하여 갔다.

3) 지역 정치세력의 재편

4월혁명을 거치며 제주지역에서도 자유당 정치세력은 거의 청산되었으며, 민주당 세력이 서서히 확장하게 되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앙과 마찬가지로 구파와 신파 간 내분이 커져가고 있었다. 진보정당 또한 처음으로 제주지역에 등장하여 한국사회당 출신의 김성숙(金成淑)이 7·29 총선에서 자유당 출신의 현오봉을 누르고 남제주군 민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김성숙은 제주도 3개 선거구 중에서 최고 득표인 13,114표로 당선되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사회정의 신념에 힘쓰고 4월혁명 정신을 되살려 민족정치의 반영에 진력함으로써 정치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 향상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⁴⁰⁾

12월 12일 제3대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2월 19일에는 시읍면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이어서 12월 26일에는 제주시장 및 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어 제주시장에 김차봉이 당선되고, 3명의 읍장과 10명의 면장이 당선되었다. 12월 29일 1960년도에 마지막으로 치러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서귀포 출신의 무소속 강성익(康性益)이 여당인 민주당 김선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4) 통일운동 추진

4월혁명 직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민간 통일 논의와 통일운동의 분출이었다. 7·29 총선 직후부터 신문,

39) 이문교 선생 소장 문서.

40) 『제주신보』, 1960. 7. 31.

잡지, 각종 토론회, 강연회를 통해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가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당시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는 크게 중립화통일론과 남북협상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혁명의 주역이었던 학생층은 자연스럽게 통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1960년 9월부터 고려대·서울대 등에서 통일문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서울대 민통련의 조직을 필두로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다양한 명칭을 내걸고 학생 통일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도 제주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통일문제연구회'(대표 이문교)가 조직되었다. 통일문제연구회는 1960년 11월 13일 제주시내 중앙극장에서 한우회(漢友會)와 공동으로 통일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5) 4·3진상규명운동 전개

4·19가 일어나자 우선 10여 년 간 입을 굳게 다물었던 4·3 피해 유족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았고,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4·3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4월혁명 은 한국전쟁과 이승만 반공 독재체제하에서 제주지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가졌던 공포감에서 벗어나 누적된 불만을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19 직후 '무고한 양민(良民) 학살' 담론이 신문기사를 통해 형성되어 갔다. 10여 년간 입을 굳게 다물었던 4·3 피해유족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 시기는 사자(死者)를 '죄 없는 양민'으로 보는 주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1960년 5월, 고순화·고시흥·박경구·양기섭·이문교·채만화·황대정 등 제주대학생 7인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하여 4·3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하였다.⁴¹⁾ 이들은 『제주신보』 광고란에 호소문을

게재하여, “4·3사건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하여 사건 당시 양민을 학살한 주동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과 인간의 탈을 쓴 야수와 같은 행위로써 양민학살, 방화 등을 자행한 주동자와 졸도들을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죄 없이 죽어간 원혼을 위령할 것”을 정부와 제주도민들에게 호소하였다.⁴²⁾ 이어서 5월 27일에는 제주도 남제주군 모슬포에서 유가족 등 주민 60여 명이 집회를 열어 1949년의 ‘특공대 참살 사건’과 1950년 ‘예비검속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호소하였다.⁴³⁾

1960년 5월 23일 국회에서 거창·함양 등지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조사단이 구성되자, 제주 출신 국회의원 김두진이 제주4·3사건의 진상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발의하였다.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경남반(반장 최천)의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6월 6일 하루 동안 제주 4·3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⁴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당시 제주신보사는 6월 2일자 사고(社告)를 내고 ‘4·3사건 및 6·25당시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하여, 국회조사단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6월 10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면서 제주신보사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1,259건, 인명피해는 1,457명에 달했다.⁴⁵⁾ 이 신고서를 접수한 제주신보의 신두방 전무는 6월 23일 제주 시 외도동에서의 일가족 10명 학살사건의 가해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여 ‘학살 고발 제1호’로 기록되기도 했다.⁴⁶⁾

1960년 6월 6일 제주도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조사단의 증언 청취 자리에서 10년 동안 한을 품어온 희생자 유족들은 처음으로 말문

41) 『제주신보』, 1960년 5월 25일.

42) 『제주신보』, 1960년 5월 26일.

43) 『제주신보』, 1960년 5월 31일.

44) 『제주신보』, 1960년 6월 1일.

45) 『제주신보』, 1960년 6월 13일.

46) 『제주신보』, 1960년 6월 24일.

을 열었다. 이들은 모두 학살 당시의 불법성과 잔인성을 폭로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조사단 조일재 의원은 총살을 집행한 군인이나 경찰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했고, 박상길 의원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시효문제가 제기되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⁴⁷⁾

1960년 6월 6일 단 하루 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제주도 현지에서 실시한 4·3 진상조사는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부풀게 하였으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조사에 그쳤다. 이들이 상경한 뒤 국회 차원에서 4·3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의 4·3에 대한 규정은 '양민학살 사건'이었고, 제주도내 언론과 제주시의회 역시 이러한 공적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1960년 7월 『조선일보』에 4·3의 실상을 기고한 고창무(高昌武)는 "수습이 안 되니 일주도로를 경계로 하여 산촌부락은 전부 소각하는 가혹한 작전을 감행하니 잔여 부락은 해안선에 연(沿)하여 있는 부락 뿐이었다. 소각당한 부락민은 불의의 변을 당하여 해안부락에 이거(移居)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입산하니 25만 도민을 적으로 만든 기묘한 작전이었다. 해안부락의 주민은 낮에는 당국의 감시와 살육에 떨고 밤이면 반도의 보복행위에 전전긍긍 주야 좌우협공을 당하여 유혈의 참극만 더할 뿐이었다."고 하여, 정부의 진압작전의 무모함을 비판하였다.⁴⁸⁾ 고창무 또한 제주지역민의 무고함을 강조하는 논조를 편 것이다.

4월혁명 공간 시기에 4·3 사자에 대한 기억은 국가가 강제한 '빨갱이', '폭도', '공비'에서 '무고한 양민', 죄 없는 희생'으로 변화했다. 제주

47) 『제주신보』, 1960년 6월 7일 : 「국회조사단 활동 속기록」(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3권에 수록).

48) 『조선일보』, 1960년 7월 17일 : 7월 24일, 「한라산은 고발한다(상·하)」.

지역민들은 국가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제를 실천해 주기를 바랐고, 특히 가해자 처벌의 요구도 봇물같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한편 4·19 직후의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도 제주도 토착세력은 4·3 진상규명 움직임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었다. 고담룡·현오봉·김두진 등 세 국회의원은 “(진상규명이) 좌익세력에 역이용되지 않도록 냉정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⁴⁹⁾ 언론에서는 제주도내 각계 유지들의 동향을 “조그마한 불평에도 공산당시(視) 당해 온 도민의 강박관념은 이제 놀라움과 초조로 변한 듯싶으며 때가 때인 만큼 혼란을 예상하여 주저하는 기색들이었다. 국시가 반공이니 공산당은 마땅히 몰아내야 되고 이 나라 과도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괴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선 안정된 시기를 폭로의 때로 택해야 된다.”고 표현하였다.⁵⁰⁾ 이성근 경찰국장 또한 “4·19혁명은 공산국가는 물론 독재국가를 배척하자는 데 일어난 것이니 도민은 이런 시기일수록 신중을 기하여 양민학살을 가장한 적색분자의 역이용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⁵¹⁾

4월혁명으로 인한 지역권력층의 동요와 더불어 기존 반공체제의 붕괴가 곧 자신들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 지역사회는 이러한 기존 권력집단의 보수적이고 미온적인 움직임에 동조하지 않았다. 결국 7·29 총선에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혁신계 정당인 한국사회당의 김성숙이 남제주군 선거구 민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이 이를 반증한다.

6) 교원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

4월혁명은 어린 학생들의 희생 속에 이루어졌다. 학원에서 이를 목

49) 『제주신보』, 1960년 5월 25일.

50) 『제주신보』, 1960년 5월 26일.

51) 『제주신보』, 1960년 5월 26일.

격한 교사들의 반응은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대구지역 학생시위인 2·28의거에서도 나타나듯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를 위해 노골적으로 교육과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하였고, 따라서 교사들은 남다른 부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4월혁명 직후부터 전국 각 지역에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1960년 4월 29일 대구·경북지역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원노조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5월 이후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제주지역에서는 1960년 5월 17일 '제주시교사조합'이 제북교 강당에서 제주시 관내 국민학교 교사 109명이 모인 가운데 학원 자유를 기약하며 결성되어 발족하였다. 이 교사조합은 제주시내 13개 국민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결성대회에서는 학원의 민주화와 자주적인 독립, 교권 확립, 교육의 정화를 위해 교원들의 단합을 결의하였다. 이 교사조합은 정식 교원노조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 조직체로 만들어졌는데, 초대 조합장은 제주북국민학교 교사인 이양구가 선출되었다.⁵²⁾

제주시교사조합은 6월 22일 내려진 문교부장관의 교원노조 해체 명령에 자극받아 6월 29일 문교부장관을 규탄하는 데모를 벌였다. 제주시 관내 13개 국민학교 남녀 교사 130여 명으로 구성된 데모대는 이날 오후 6시 동국민학교 교정에 결집하여 마이크차를 앞세우고 관덕정 광장-서문통-제주신보사-구(舊)세관-칠성통-도립병원-제주극장 등을 거치면서 "이(병도) 문교장관의 비민주적 담화를 규탄한다", "대한교련은 즉시 해체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 행진하였다.⁵³⁾

52) 『제주신보』, 1960년 5월 19일.

53) 『제주신보』, 1960년 7월 1일. 이 날 채택된 결의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교육자는 민주주의의 국시에 단결하여 4월혁명 정신에 의한 교육의 민주화 촉진과 교원 대우 개선, 교육의 자주 중립을 기하기 위하여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행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결국 8월 13일에는 '제주도교원노동조합 연합회'가 서귀국민학교 강당에서 초등교사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되었다.⁵⁴⁾

Ⅳ. 맺음말 - 제주지역 4월혁명의 성격과 의의

1960년 4월혁명으로 분출된 자유와 민주주의의 열망과 새로운 사회와 국가 건설의 진로는 다음해 5·16군사정변으로 다시 막혀 버렸다. 정변 발생 이튿날인 5월 17일 제주지역 4월혁명의 주역인 제주대학생 이문교·박경구가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다.⁵⁵⁾ 4·3 진상조사에 앞섰던 제주신보사 신두방 전무 또한 검거되어 고초를 겪었다. 1961년 6월 15일 경찰이 직접 지휘하여 전년도에 건립된 '백조일손위령비'를 부셔서 땅에 파묻어 버렸다.⁵⁶⁾ 4·3은 극도의 반공·군부·독재국가 체제 속에 금기의 단어가 되어버렸다. 지역 권력은 철저하게 극우반공 체제에 순응한 토착세력 위주로 편성되었다.

제주현대사를 총괄해서 볼 때 제주지역의 4월혁명은 1947년 3·1집회, 1948년 4·3항쟁 당시 5·10단독선거 거부 이후 사라진 대중적

할 수 있는 교원노조 모체인 교사조합을 조직한 우리들은 총궐기하여 이(李) 문교장관의 담화를 규탄하여 과거 비민주적 학교 운영의 기수를 다루던 일반 말단 교육공무행정가들이 반성함이 없이 어용단체였던 교육회 가입을 강요하여 우리 조합 육성에 반동적인 행위를 도전하는 한 우리의 투쟁은 불사한다."

54) 『제주신보』, 1960. 8. 15.

55) 『한국일보』, 1961. 11. 11 ; 이문교 선생의 증언(제주시 연동 자택, 2002. 5. 16 채록 ;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 2010. 6. 19 채록).

56)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월간 말, 2000), 76~78쪽.

집회 및 시위의 부활이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짓눌려 있던 제주지역의 시민들은 4월혁명을 거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저항권을 인식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4월혁명을 통해 최초로 가두로 진출해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여 전 시민적 역량을 결집한 것은 제주지역민들에게 지대한 정치사회적 영향을 미쳤고 민주주의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였다.

제주지역의 4월시위가 타 지역에 비해 늦었던 이유는 지리적 격리, 정보의 부재라는 외적 변수 외에 4·3으로 인한 국가공권력에 대한 위축감, 반공 이데올로기, 레드콤플렉스 등 지역사회 내부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들 수 있다. 또한 제주지역 사회의 공동체성 때문에 보안 유지가 힘들고 지인들에 의해 회유 또는 억압받아서 봉기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의 4월혁명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으로 시작하여 시민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지역사회를 변혁시켜 놓았다. 제주대학생이 주도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시민계층으로 외연이 확장되었다. 이들 혁명의 주체세력은 봉기 및 시위에 그치지 않고 4월혁명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4월혁명 완수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을 변화시켰고, 전국적인 통일운동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학원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과거사 해결운동으로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4·3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4·3으로 인한 레드콤플렉스를 뚫고 7·29 총선에서 혁신운동계열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4월혁명 이후 민주화의 진전 과정은 1년 뒤 5·16군사정변으로 좌절되었지만 제주지역 학생·시민계층의 변혁운동의 역사적 자산이 되었다. 4월혁명은 역사적 변화를 거쳐 1980년대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의 자산이 되었고, 주민사회운동으로 이어지는 밑바탕이 되었다. 앞으

로 제주지역의 4월혁명에 대해서는 후세대의 민주화 교육 자료로 전승될 수 있도록 올바른 자료 정리와 역사 기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4월혁명의 정신과 원동력이 새로운 제주지역사회의 발전을 일구어나가는 원천이 되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 제주지역사회의 변동과 관련하여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전개된 혁명 후속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혁신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의 활동을 시간 공간적으로 교차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후속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강용삼·이경수(1984), 『대하실록 제주백년』, 태광문화사.
- 김석준(1998), 「제주지역의 선거(1948~1992) -개괄적 검토와 재해석」,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 김종민(1999), 「4·3 이후 50년」, 『제주4·3연구』(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4·3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사비평사.
- 박찬식(1999), 「4·3연구의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2, 실천문학사.
- 이영권(2002), 「제주도 유력자 집단의 변천과 성격」, 『4·3과 역사』 2, 제주4·3연구소.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 이은진(2004), 『근대 마산 - 압축된 모순의 폭발지』, 경남대학교 출판부.

김영범(2005), 「4·3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3과 역사』 5, 제주 4·3연구소.

제주도(2006), 『제주도지』 제3권.

박찬식(2006),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집회와 총파업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2.

박찬식(2007), 「4·3의 공적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4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0), 『4월혁명과 한국의 민주주의』, 4월혁명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발표자료집.

이문교 선생 소장 문서 및 인터뷰 녹취록

『제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April revolution of Cheju area and change of local community

Park, Chan-Sik*

ABSTRACT

April revolution of Cheju area was rebirth of popular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ich disappear since 3·1 assembly(1947) and 4·3 Uprising(1948). Citizens of Cheju area that is weighed down in anti-Communist ideology did important experience that recognize basis right of resistance of liberalism and democracy flowing April revolution. When April revolution was spread, the Cheju area peoples waged large scale demonstration streaming on street by first, this exercised great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 on the Cheju area peoples, and they experienced democracy vividly.

Reason that April demonstration of Cheju area was later than other area is due to geographical isolation, absence of information, nightmare about country government power, anti-Communist ideology, and Red Complex since 4·3 Incident.

April revolution of Cheju area was expanded to citizen's campaign beginning from student movement, and did so that change community. Cheju university students led, and student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participated, and was spread as citizen class. These main group of revolution achieved 'duty for completion of

* Lecturer, Jeju National University

April revolution', and changed political and social topography of community, and joined actively to national unity exercise. They waged campaign for academy democratization, and attempted exercise to clear truth of the 4·3 Incident as movement that solve history past.

Key word : April revolution, April demonstration, 4·3 Uprising, Citizens of Cheju area, Cheju university students, duty for completion of April revolution, national unity exercise, campaign for academy democratization, exercise to clear truth of the 4·3 Incident

논문투고일 2010. 06. 30

심사완료일 2010. 08. 07

게제확정일 2010. 08. 16